

제39차 여성정책포럼

#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

일시\_ 2007년 6월 1일 (금) 14:00-17:00

장소\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본관2층)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라는 주제로 제39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가족에 관련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성별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등을 위해 ‘여성인권 법제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한계를 성 인 지 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경 애

# 행사 일정

14:00 - 14:30 등 록

14:30 - 14:40 사 회 변 화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 사 말 김 경 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40 - 15:10 주제발표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0 - 16:40 지정토론 남 성 민 (대법원 등기호적 심의관·판사)  
문 경 란 (중앙일보 여성전문기자)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은 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차 인 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16:40 - 17:00 종합토론

17:00 폐 회

# 목 차

## 주제발표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 ..... 1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원고

남 성 민 (대법원 등기호적 심의관·판사) ..... 20

문 경 란 (중앙일보 여성전문기자) ..... 25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27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3

조 은 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35

차 인 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40

#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민법 제정 이래 많은 비판을 받아 오던 호주제도는 마침내 2005. 2. 3.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sup>1)</sup>되고, 2005. 3. 31. 호주제 폐지 규정을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sup>2)</sup> 2008년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개정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호적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많은 논의가 거듭되어 오다가 드디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어 2008년부터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sup>3)</sup>

법의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하에서는 그 동안의 여성운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새로운 법에 얼마나 제대로 수용되어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우선 호주제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Ⅱ)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Ⅲ)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을 기존의 호적법과 비교(Ⅳ)를 통하여 소개한 뒤, 그동안 지적받아 왔던 내용들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어느 정도 시정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 않은지 진단(Ⅴ)해 보고자 한다.

## Ⅱ. 2005. 2. 3.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나타난 호주제의 위헌성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 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즉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는 우리 민법상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의 하나로 1960년 민법 시행 후 존속되어 온 제도인 반면, 제정 당시부터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와 폐지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속에서 호주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와 전통의 관계를 비롯하여, 현

---

1)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참조.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

3)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신분등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가족관계등록이라는 말보다 신분등록이라는 말을 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신분등록(부)과 가족관계등록(부)을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로 한다.

행 민법상의 호주제가 양성평등 원칙 및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는지, 또한 민법 제778조가 규정하는 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다수의견 6, 소수의견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더욱이 가족생활 내에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이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성평등’의 가치가 그 어떤 관습과 전통, 이념 등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백히 한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sup>4)</sup> 이하의 내용은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에 나타난 호주제의 위헌성 가운데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 1.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남계혈통 위주로 가를 구성하고 승계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호주제의 남녀차별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다.

## 2.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민법 제778조는 민법 제984조와 결합하여 호주 지위의 승계적 취득에 있어 철저히 남성 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을 제치고 아들이, 또한 할머니, 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미혼의 딸도 아들이나 손자가 없을 경우에는 호주가 될 수 있으나,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가의 가족원으로 입적되므로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지 않는 한 호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주제는 모든 직계비속

---

4) 조숙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새로운 신분등록 체계에 관한 검토, 「사법정의와 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6. 11, 196-197면.

남자를 정상적 호주승계자로 놓고 고안된 제도이며,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가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호주 지위가 주어지는 잔여범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 3.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여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부(夫)의 가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의 입적제도는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종속적 지위를 강제한 다. 처의 입적제도는 호주승계에 있어서 여자의 열등적 지위와 결합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어려서는 아버지(때로는 오빠 또는 남동생)의 가에, 혼인하여서는 남편의 가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에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봉건적 삼종지의(三從之義)의 한 모습을 오늘날에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지언정 개개의 여성을 존엄한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4.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 (1) 부가입적(父家入籍)원칙의 문제

현행 민법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를 부가에 입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1조).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부가(父家)에 입적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자녀를 부계혈통만을 잇는 존재로 간주하겠다는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반하며, 부에 비하여 모의 지위를 열위에 둠으로써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다. 모가에 입적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부가로의 입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므로 원칙적인 남녀차별성을 치유할 수 없다. 자를 부가에 입적시킨다는 이 민법조항의 본질적인 의의는 단순히 호적법상 호적편제의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계혈통을 통한 가의 계승이라는 호주제의 관철에 있다. 대부분 호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부의 가에 자녀를 편입시키는 것은 ‘호주 중심의 가의 구성’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를 이루며, 또한 ‘후손을 통한 가의 계승’이라는 호주제의 또 다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이혼 후 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母)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여전히 부(父)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된다. 그리하여 부의 양육권 포기, 재혼 등으로 부와 자녀간의 교류가 전혀 단절되어 있더라도, 자녀학대, 성추행, 폭행 등으로 가정파탄의 원인을 부가 제공한 경우에도, 당사자인 자녀가 아무리 부가를 떠나 모가에 입적을 원하더라도, 부 스스로 자녀의 모가입적을 분명히 원하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여전히 부가에 소속되고 그 부가 자녀들의 호주가 된다. 반면 모는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에 불과하게 된다. 모와 자녀가 현실적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비정상적 가족으로 취급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할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헌법에 반함은 물론 오늘날의 가족현실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 (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처가 부(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가에 입적시키려면 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784조). 부(夫)가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입적함에는 처의 동의라는 제한이 없는데 비하여, 처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부계혈족 아닌 혈족의 부가(夫家)입적을 제한하려는 것이고(제784조 제1항의 경우), 또한 가계계승을 고려한 것으로서(동조 제2항의 경우) 역시 남계혈통만을 중시하는 호주제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 (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제2항). 그러나 생부가 인지하면 모나 자녀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의 가에 입적된다. 생부가 모와 혼인할 의사가 없고, 자녀를 양육하지도, 그럴 의사가 없더라도 생부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자녀는 가족관계의 엄청난 변화를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남성우월적 사고에 터잡은 것이다.

### Ⅲ. 가족관계등록법이 마련되기까지의 논의 과정

#### 1. 호적제도의 개편논의

호적제도의 개편에 관하여는 1995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있었다. 이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호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행의 호적체계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호적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에서는 호적의 편제방식으로서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감과 단점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당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호적의 편제단위를 부부 및 그 자로 한다는데 합의하였고, 개정요강안에서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더욱이 2003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 중 제6차 회의에서는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가족별 편제방식과 개인별 편제방식이 대등한 비율로 논의되었다.

주요 대안으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 1적제’, 부부와 미혼자녀를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가 논의되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오던 중, 2004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폐지에 대비하여 법무부와 대법원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검토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행 호적감독기관인 대법원은 2005년 1월 현행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부안으로서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인 ‘혼합형 1인 1적 편제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은 1인 1적의 가족부에 목적별 공부식 증명을 도입한 것으로서 1인 1적제의 장점과 목적별 공부의 장점을 채택한 방식이다. 대법원이 제안한 신분등록 편제방안은 개인의 존엄 및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효율적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필요한 정보의 철저한 공시를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법무부는 2005년 1월 10일 대법원,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동안 검토된 내용(대법원안 포함)을 토대로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방안인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를 정부안으로 2005년 1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바람직한 신분공시제도에 대해서 2005년 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나, 관장기관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무부

는 2005년 9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한 후, 동년 12월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2006. 3. 3), 대법원안은 2005. 12. 28. 이경숙의원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경숙의원안’이라고 함)으로 대표 발의하였다. 그 밖에 목적별 편제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운 2005. 9. 28.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회찬의원안’이라고 함)이 있다.

각 법률안은 몇 가지의 큰 차이점(관장기관, 편제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한 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며,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한 신분관계를 공시함과 아울러 가족제도에 대한 국민정서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제사법 소위원회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3건의 법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7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은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 (1) 새로운 신분등록의 편제방식

신분등록의 편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크게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별 편제방식’,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개인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로 편제방식을 달리하는 ‘목적별(사건별) 편제방식’이 검토되어 왔다.<sup>5)</sup>

5) 이 밖에도 주민등록정보와 신분등록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 1원화 방안’이 있는 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등록과 신분등록은 그 목적과 편제원리가 상이하고 정보의 과다노출우려가 있으며, 관장기관과 근거법령통폐합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 가. 가족별 편제방식

가족별 편제방식은 현행의 호적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家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성하는 것이다. 개편작업이 수월하고 기본가족 전체에 대한 신분정보 파악이 용이하며 국민정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족’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함에 따라 기준인을 선정해야 하는 점, 입양·혼인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이적·이거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처리가 복잡해진다는 점, 신분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된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나. 개인별 편제방식

개인별 편제방식은 1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고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포함하되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1인 1적제라고도 한다. 가족별 편제방식과 달리 기준인 선정 및 변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호주제 폐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호적전산화에 따른 신분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정보보호의 장점이 있는 반면, 검색기준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확하다는 점, 개편작업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정서에 쉽게 수용되기 어렵고 가족 전체의 신분정보 파악에 불편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다. 목적별(사건별) 편제방식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사망등록부 등 목적별로 별도의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충실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담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족관계 파악이 매우 곤란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등록부간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 라. 검토

가족별 편제방식에서는 기준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호주제의 호주와 개념이 유사하게 되어 남녀불평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혼으로 친권자·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호적을 이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종전 호적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별 편제방식이 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정서 등 개인별 편제방식의 단점을 고려하여 개인별 편제양식을 취하되,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공시되도록 가족단위 편제방식을 반영하였다.

## (2) 신분등록제도의 관장기관문제

법무부 측은 신분등록사무의 법적 성격, 삼권분립원칙, 국가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관장기관을 법무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 측은 대법원이 그간 호적 업무를 담당해 옴으로써 인적·물적 기반이 확충되어 있다는 점, 법무부 이관으로 인한 비용 및 업무 숙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행정부처에의 정보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법원의 관장을 주장하였다.

신분등록·증명업무는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법원의 송무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신분등록부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등록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등 국민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법정 안정성의 추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분등록업무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는 사법부 내에 독립된 관장기관을 두고 대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sup>6)</sup>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 IV.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

### -기존의 호적법과의 비교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8장, 124개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을 기존의 호적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현행 호적사무는 지방자치사무로서 시·읍·면장이 관장하고 관할 가정법원장이 감독,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

6) 정현수, 호적제도의 변천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가족법 연구(제20권 2호)』, 25면, 2006.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999년 9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호적사무가 지방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국가사무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001. 8. 18. 연간 664억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호적사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이양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 (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현행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민법상 ‘가’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여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부에 가 구성원들의 각종 신분변동사항을 함께 등재·공시하여 왔다.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그 동안 호적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전부 기재된 호적등본의 형태와 호주와 신청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초본의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어, 증명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가 과도하게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호적 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 사유만 소명되면 누구나 열

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6.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3조 내지 제98조)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

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한다.

##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V.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

## 1.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의의

### (1)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을 가에 속하게 함으로써 가의식 속에서 유발되는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제거하였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헌법 제36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가족구성원 각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구현하고자 한 호주제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인의 신분 정보 보호

신분등록부에 기재되는 개인의 정보 수집과 증명 발급 관리 등을 더욱 엄격하게 함에 따라 개인의 신분 정보 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증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 2.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

### (1) 법률제명의 문제

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 법사위의 대안으로 만들어지기 전, 3개의 호적법 대체입법안-노회찬 의원안, 이경숙 의원안, 정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즉 모든 국민의 신분등록 장부를 각 개인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세 법안을 통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률명칭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개인별 신분등록부의 이름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되어 버렸다.

신분등록제도의 기본 틀을 개인으로 바꾸면서까지 법률제명이나 등록부의 이름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개별 국민의 지위를 가족 안에 묶어 두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호주제 폐지로 가족이 해체될 것을 우려하는 보수 세력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동안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던 家에 가족원이 종속된다는 가의식을 불식시키고 헌법의 이념인 개인의 존중을 가족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주저하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家意識 속에서 유발되는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제거하고, 현재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가족형태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가족법의 주인공은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인 스스로의 자기결정에 따라 자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sup>7)</sup>

개정 민법은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범위 짓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개정 민법상의 가족이라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법률제명의 선택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

7) 김원정,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의 의의와 한계, 2007. 5. <http://cafe.naver.com/chanchanchan>(카페 노회찬을 사랑하는 여성들) 참조.

## (2) 등록기준지의 기재 필요성-본적 개념의 유지 문제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는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기준지는 신분등록 정정허가 등 각종 호적비송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등록기준지를 정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이 달라지거나 불신고로 관할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중국적 재외국민과 같이 국내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의 준거가 되는 곳이 필요하다는 점, 신분등록증명 발급시 검색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과거의 신분 및 가족관계 등을 알기 위하여 과거의 호적부와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매개할 매개체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필요성이 주장된다.

그러나 현재 개명허가신청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등은 본적지뿐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되며, 이외 호적정정신청, 취적허가신청 등의 경우에 본적지를 관할법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현행 호적법상 호적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적사무가 국가사무화되면 호적비송사건의 관할을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이미 현재에도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본적지를 옮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송당사자의 편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호적사무의 전산화의 완료로 개인별 신분등록 편제기능을 취하게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분기록 색출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본적제도도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검색기능이나 매개기능을 위해서도 등록기준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호적제도에서 본적제도는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에, 등록기준지를 두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거주지만으로도 충분히 서류관리자를 구분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준지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 (3) 본 개념의 유지문제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는 등록부에 본(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등에서 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본(本)도 등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본(本)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781조에 따른 제반 등록 사항의 흠결이 발생하여 민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성에 본을 붙이는 것은 시조를 달리하는 동성(同姓)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함이다.<sup>8)</sup> 그러나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인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선언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 역시 폐지된 상황에서 ‘본(本)’은 더 이상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식’을 유지시킬 뿐이다.<sup>9)</sup> 이러한 점에서 이번 민법 개정시 ‘본(本)’이 계속 유지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4) 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

증명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분정보보호를 위해 증명서의 발급신청 자격 및 대상도 제한하고 있다.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친양자입양증명은 증명서의 발급대상을 본인이나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더욱더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호적법상의 ‘호적공개원칙’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록부의 ‘비공개원칙’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명서의 발급신청 자격 및 대상의 제한이 개인의 철저한 신분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본인 이외의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제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이때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0)</sup>

#### (5) 혼인외 자의 기재 필요성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 신고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증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 하에서는 혼인외의 자의 경우 모가에 입적해야 하는 등 법률효과가 달라지므로 혼인외 출생자인지 여부를 출생 신고시 밝힐 필요가 있었으나, 개인별 신분등록편제방식을 따를 경우 신분등록상 혼인 중 및 혼인외 출생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8)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44면.

9) 조숙현, 전계논문, 207면 참조.

10) 김상용, “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향”, 가족법연구Ⅱ, 법문사, 2006, 304면.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는 기재사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혼인외 자임에도 그 모가 혼인외 자임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그 자의 부가 후에 인지하고자 하더라도 인지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기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혼인 외 자가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혼의 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와 기혼의 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기혼인 모가 혼인외 자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자로 친생자 추정이 되므로 그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남편의 자로 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미혼의 모인 경우에도 혼인외 자임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기에 혼인 외 자임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위와 같이 혼인외 자의 부가 인지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sup>11)</sup>

#### (6)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의 절차 문제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자녀는父의 성을 따르나 일정한 경우 즉,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아버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부 합의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71조는 부부가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혼인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시와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신고해야 함에 따라 결국 자의 성을 정하는 절차를 번잡하게 해 두고 있다. 이는 부모의 자율적인 합의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하고자 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시의 신고만으로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VI. 마치며

지금까지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제정의의와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11) 조숙현, 전계논문, 208-209면.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은 그동안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더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호적의 편제원리를 기존의 가단위에서 개인별로 전환하고,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증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정 민법의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그 뒷받침을 위한 절차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이제서라도 탄생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몇 가지의 과제를 짚어보며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 가족관계등록법은 그동안 호적법이 해 온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국적이나 행위능력의 유무, 친족관계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신분관계변동의 내용을 사후에 수록하여 증명하는 사명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공시되는 신분사항은 신분법질서에 의하여 형성되고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목적별로 발급되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과 부모(양부모포함), 배우자,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체법인 개정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을 아우르지 못하는 태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체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실체법과의 정합성 유지).

나. 또한 기존의 가 단위의 호적편제를 개인별 편제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상당 부분이 가족관계등록법의 관장기관인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어떻게 작용될지 미지수이다. 규칙 제정 시에도 개인의 존엄 및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의 실현, 신분보장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어야 할 것이다(하위법령의 구체화).

다. 목적별 증명서의 종류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각 가정의 구성원을 모두 밝힘으로써 자신의 가족관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욕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개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정보만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이 있었듯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본인을 기점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다 나열되는 증명서보다는 증명하고자 하는 범위만을 한 장의 증명서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과 부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본인과 부의 정보만을 색출해 내어 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혼가정의 자녀, 혼인의 출생자 등 소위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으로 치부되어 사회적 편견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다양한 증명서의 세분화).

라. 호적부를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개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사항을 이기하여 전산화 자료로 전환한 후 관리되어 온 호적전산망을 개인별 편제에 맞게 재구성할 것이다. 여러 번에 걸친 자료 조작으로 개인 신분 정보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분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오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신분정보의 진실성의 담보).

마. 신분등록원부(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국가가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분등록원부(전부증명)의 발급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는 목적별로 조합해서 발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부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정보인권의 보호).

## 참고문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친족·상속편) 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 2005. 2. 21.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 9. 14.
- 박기준,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 4.
- 박기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 4.
- 박기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2006. 4.
-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정현수, 호적제도의 변천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제20권 2호)』, 2006.
- 조은희,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I ),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조숙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새로운 신분등록 체계에 관한 검토, 『사법정의와 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6. 1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2006. 5. 17. 전자관보

## I. 첫머리에

박복순 연구위원님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의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정 단계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까지 적절히 소개해 주셔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될 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근거 법률(「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일이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일과 같은데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열리는 첫 번째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률의 주요 내용을 통해 내년부터 현행 호적 등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시행 방향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먼저 현행 호적법과 비교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을 주제발표를 보충하는 정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II. 가족관계등록법의 의의 - 주제발표 내용의 보충

### 1. 개인별 편제방식 채택 효과 -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

호적은 호주제를 뒷받침하는 공부(公簿)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현행 호주제가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호주승계 순위에 차별을 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원칙 위반으로 호주제 자체의 폐지로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의 편제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별적 요소가 잔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로 호적을 만들게 된다면 현행 민법 하의 혼인시 처의 남편 호적 입적,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호적을 전면 폐지하고, 그 대체방안으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각종 신분 변동사항에 대한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여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



신의 등록부가 존속하되 다만 배우자별로 혼인관계만 각자의 등록부에 추가됩니다. 한편,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의 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녀 고유의 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게 되므로, 자녀들이 부모 중 어느 일방의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더 이상 친정 아버지 호적에 다시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민법이 호주제와 함께 폐지한 각종 입적, 복적, 분가 등의 폐지의 취지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원칙에 입각하여 잘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현행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의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모든 신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별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사항, 출생·사망·개명 등 본인에 관한 인적 사항, 혼인 및 이혼 사항, 입양 및 친양자입양 여부 등이 기록됩니다. 현재와 달리 가족들의 자세한 개인정보는 해당 가족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내년부터는 현재와 달리 발급권자가 엄격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발표자께서 결론 부분에 언급하신 전부 증명은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 및 그 가족들은 5가지 증명서 중 증명할 사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만 있어 공개되는 개인정보를 필요에 맞게 최소화하여 사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3. 현행 호적 절차의 개선

### (1) 신속한 처리 가능-신고지 처리의 원칙

현재에도 호적신고는 시·구·읍·면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호적사무처리는 본적지에서 하여야 하므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신고서류 우송기간을 고려하면 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그 사무처리에 약 1~2주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법 제4조) 현재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2) 혼인신고시 당사자 의사의 확인절차

결혼은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합니다. 혼인의 양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호적법」 하에서는 혼인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시 당사자 일방이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 원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3조제2항).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 Ⅲ. 발표자가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 1. 법률 명칭의 “아쉬움”에 대하여

법률 명칭에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국회 법률안 심사과정의 공청회에서 “신분”이라는 말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또는 계급”의 부정적 의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가, 제출된 3개의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만들면서 법률안 내용에 “신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과 아울러 입법적 결단으로 위와 같은 법률명을 채택한 것입니다. 법률 명칭에 “가족관계”가 사용된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이 민법의 절차법으로, 친족편에 있는 실제 규정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상세한 절차를 담고 있고, 개인의 출생, 사망, 혼인 등을 통해 가족관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 지적하시는 것처럼 법률이 개인이 아닌 “가족”을 부각하거나 “개별 국민의 지위를 가족 안에 묶어” 두기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추후 법률 개정시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 2. 등록기준지가 본적의 개념을 유지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상 본적은 가(家)의 소재지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적은 호주를 비롯한 그 가족의 지역연고를 뜻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나 출생지에 상관 없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고, 그 변경 역시 호주만이 가능하며 전적을 하더라도 같은 지역 내로 변경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있어 일반인들은 본적을 고정불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본적 제도도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관서나 해외 동포처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호적비송사건의 관할 법원 결정 등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등록기준지가 생깁

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주 중심의 본적과 달리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등록기준지를 가질 수 있는 데다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등 본적과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대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발표자가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은 그 목적과 편제원리가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 3. 발급권자 제한 문제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발급권자로서 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민법상 가족 중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을 사람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만이 표시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알고자 한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발급권자로 한다고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4.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절차의 중복 지적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나중에 출생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 출생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시에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면 그 후 부부 상호간 동의로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은 민법의 해석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가 출생신고시 위와 같은 협의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그 때서야 그 협의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상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출생신고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부모와 별도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 성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생신고서에 그러한 협의가 있다고 기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서 양식에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는 란을 부동문자로 기재해 두고 “○”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신고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5. 본 개념의 유지 및 혼인 외의 자 기재 필요성

“본”과 “혼인 외의 자녀”는 모두 민법이 그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라기 보다는 민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절차법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신고서에 본이나 혼인 외의 자녀라는 사항을 기재(실무상 양식에 “○” 표시하도록 함)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만 “혼인 외의 자녀”라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인 외의 자녀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아버지를 확정하여 기재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지 혼인 외의 자녀를 혼인 중의 자녀와 구별하고 이를 등록부상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6. 기타 사항

새로운 법률 시행을 위해 대법원은 그 제정 전부터 새로운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의 양해를 얻어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2008. 1. 1. 정상적인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련된 5종류의 증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증명서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적절한 증명서양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IV. 여론-사회인식의 변화 필요: 무분별한 증명서 제출 자체

지금까지 입사, 학교, 은행거래 등 국민들의 일반생활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적등본의 제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신상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과다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증명할 사항을 5가지로 세분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가급적 본인에 관한 인적사항만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호적등본 대신 제출받는 등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의 의의와 한계

문 경 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여성전문기자)

### 1. 총평 :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은 기본적으로 호적법에 비해 ‘진일보’, 내용적으로는 ‘절충적’  
- 법의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 반대할 이는 별로 없을 것. 하지만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질 것.

첫째, 법은 일반적으로 현실이나 사회 구성원의 인식보다 보수적임. 양성평등이나 가족에  
대한 관념 또한 달라지는 인식이나 세태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움.

둘째, 남녀차별의식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음. 최근 차별이 조금씩 해결돼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 작용. 역차별 논쟁까지 거론되는 상황

셋째, 양성평등이나 가족관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요구됨

### 2. 의의 :

- 호주 중심 편제에서 개인별 편제
- 양성평등 구현 : 호주제의 남존여비 사상을 법체계에서 몰아내고 개개인별 편제를 채택함  
으로써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민주적 가족제도 구현
- 목적별 증명서 발급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보다 충실

### 3. 한계

#### 1) 신분등록제도의 기본틀은 개개인으로 두면서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법’

- 일종의 ‘국민정서법’ :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달래려는 타협안
- 가족 개념이 민법에 들어간 것 또한 같은 맥락 :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민법개정 당시 가족개념을 개정 민법에 집어넣었음. 민법에  
가족 개념과 범위를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가족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
- 가족관계등록법 제정도 같은 전철을 밟는 꼴  
==> 적절한 법 이름을 찾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함

## 2) 등록기준지의 문제

- 등록기준지를 두는 것은 주무기관의 행정효율을 중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 하지만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를 찾기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단서가 필요할 것임
- 본적지와 같은 기능(연고주의·지역주의 부추긴다는 비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 이미 결혼한 여성에게는 기존의 본적지를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삼을 것이란 점에서 본적지와 같은 기능을 할 것임. 하지만 새로 결혼하는 젊은 세대나 이혼한 여성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현재도 본적지를 거주지로 이전해 본적으로 삼는 등 본적지의 개념이 희석돼가고 있는 현실  
==> 등록기준지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3) 본(本) 개념의 유지

- 새 민법은 강제주의가 아닐뿐 부계혈통주의임이 분명함/ 새 민법으로 약화는 될 것임
- ‘본’은 씨족사회의 흔적. 성이 혈통을 표시할 것, 한국에서는 혈족의식 높아서 새 민법에 본을 뒀으로써 혈족의식을 온존시킬 수 있을 것임.  
==> 가족관계등록법에 본을 둘 필요없음. 본은 종중에서 관리하는 족보에 두면 충분할 것임.

## 4)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문제에 대하여

- 성별변경 사실, 국적변경 사항, 이혼여부, 입양 및 과양 등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
- 소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으나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될 때 진정한 인권국가가 될 것임.

## 5) 가족관계등록법과 민주적 가족 의식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 법제화는 일단계일 뿐.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도록 법의 제정과 목적, 의미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부장제의 근간이던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평등한 관점과 다양한 가족에의 차별과 편견해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인권 차원의 접근으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2006. 3. 3), 대법원안은 이경숙의원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2005. 12. 28)하였으며, 목적별 편제 중심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새 신분등록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던 위 3개 법률안을 폐기,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된 절충안이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법무부안이 일부 수용되었고 목적별 법안의 내용의 반영은 미미했다. 호적법 대안 논의는 2년여 동안 신분 공시에 관한 내용을 쟁점으로 하기보다는 관장 부처의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었고, 4월 법사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 <1> 가족관계 등록법의 주요 내용

#### 1.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등의 국가사무화(안 제2조·제3조 및 제7조)

신분등록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

등록사무처리 권한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 완화.

#### 2.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안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국민 개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 개인별 신분증명제도.

#### 3. 목적별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안 제14조 및 제15조)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증명서 형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증명서 교부신청 한정적으로 인정하여 발급 요건 강화. 친양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요건 강화로 정보공개 최소화.

4. 「민법」 개정에 따른 절차 마련(안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민법」 개정으로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혼인 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 첨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모의 성을 사용하려는 경우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시에 신고.

5. 현행 「호적법」 일부 미비점 개선(안 제76조 및 85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 이혼신고 가능,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 가능.

6. 국적변동사항의 기록·관리·통보(안 제98조)

이중국적자의 한국국적 선택신고 등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도모.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7조 내지 제119조)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자(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 확보 차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 부여로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 등록정보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2> 가족관계 등록법의 의의와 한계점

신분등록사무가 행정업무이므로 사법부가 관장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법원이 사무관장의 역할을 해왔고, 지금까지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효율성의 측면과 정보독점 견제를 고려, 대법원이 관장하게 된 것은 적절하다. 목적별로 증명서를 분리·발급하게 한 것과,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절차 마련의 중요성) 등은 의미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 1. 개인의 존엄성 구현과 배치된다.

### 법률제명의 불합리성

개인 신분을 공시하는 신분등록제인 새 법안의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정해짐으로써 개인별 편제 중심으로 논의를 거쳤음에도 법에서는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 신분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지위는 가족을 통해 구성된다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실상 호주제의 ‘가’별 편제방식 유지와 다름이 없다. 국민 개별 신분변동사항의 기록·관리·증명하는 내용이 핵심임에도 법안 명칭은 그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법에서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을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1조, 9조)으로 정리하고 있어 신고해야하는 신분변동사항은 가족관계 발생 여부가 기준이 되며, 이것이 등록 사항이 되는 것이다. 신분등록은 신고인의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최소의 범위에서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관계를 우선으로 개인의 신분 등록을 설정하는 것은 원치 않는 정보가 노출되고, 개인의 존엄권을 존중하는 취지라 할 수 없다.

발제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과 부모(양부모포함), 배우자,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법인 개정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을 아우르지 못하는 태생의 한계를 지적하였는데 실정법에서 현실을 담고 이후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호주제 폐지 당시 가족관계를 설정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음을 인식하고 빠른 개정 추진의 노력이 요구된다.

## 2. 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 1) 등록기준지 기재는 본적 개념의 유지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호적사무가 국가사무화되면 호적비송사건의 관할을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개인별 신분등록 편제가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찾아낼 수 있어 따로 신분기록 색출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본적제도도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등록기준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적이란 남성호주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에 기반하여(혈연, 지연)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에, 본적을 대체한 등록기준지를 두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되리라 본다. 여성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존의 남편 본적지를 등록기준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주지만으로도 충분히 서류관리자를 구분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준지를 둘 필요는 없다. 신분등록·관리·증명이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이 법률안에서 본적개념은 유지될 이유가 없으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보여진다.

## 2) 본 개념의 유지문제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 역시 폐지된 상황에서 ‘본(本)’은 더 이상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식’을 유지시킬 뿐이다.

## 3)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의 절차 문제

법에서는 자녀의 모성 사용 시(예외규정) 이중신고하게 되어 있다. 출생신고시 민법 제 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71조는 부부가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혼인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시와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부모의 자율적인 합의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하고자 한 입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민법개정안(혼인신고시에 등록된 것과 달리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민법 781조 제6항)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출생시 한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4) 양성외의 성에 대한 고려의 문제

남녀 이분법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 주민등록번호로 남녀가 구분되어 성전환자가 성별변경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의 변경을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되어야 하며 이 경우 새 신분등록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에 기재될 것이다. 이런 증명서에 대한 발급은 양성이외의 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쉽다할 것이다.

### 3.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미흡하다.

#### 1) 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의 필요성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족, 기본, 혼인, 입양 등 목적별 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친양자입양증명은 증명서의 발급대상을 본인이나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더욱 발급을 제한하고는 있다. 그러나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신분등록원부에는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의 개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과 같은 이력사항의 기재,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 기재, 입양관계증명서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은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는 위배된다. 즉, 기본증명과 신분변동사항이 분리되지 않음에서 오는 폐해이다.

따라서 신분등록원부를 발급하는 규정은 반드시 최소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모두 나열되는 증명서보다는 필요한 증명 범위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선택발급이 가능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민감한 신분변동사항의 불필요한 공개로 이러한 이혼가정의 자녀, 혼인외 출생자 등 사회적 편견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혼인외 자의 기재 불필요

출생 신고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편제방식을 따를 경우 신분등록상 혼인 중 및 혼인의 출생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4.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의 한계.

현실에 존재하는 한부모가족, 복합가족, 입양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경우도 신분변동에 대한 신고나 신분증명서 발급에 있어 새 법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상’ 가족의 틀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정상’에 속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신고하거나 변동사항을 기재할 때 불편함과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이혼, 입양, 혼인외의

자, 파양 등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항들이 드러나 겪게 되는 어려움이 생겨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다양한 각 가족형태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가족관계등록법의 관장기관인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규칙 제정 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 성 평등 이념,  
개인의 신분보장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각 영역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세심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등록법의 제정의의와 한계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선 발제자의 귀한 논문을 읽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은 발제자가 지적한대로 그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한 양성평등적 가족부(家族簿)로서의 특성을 갖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제 동 법의 실시로 호주제의 여성차별적 요소들이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제도에서의 남녀차별 등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했던 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사회가 진정한 민주평등사회로서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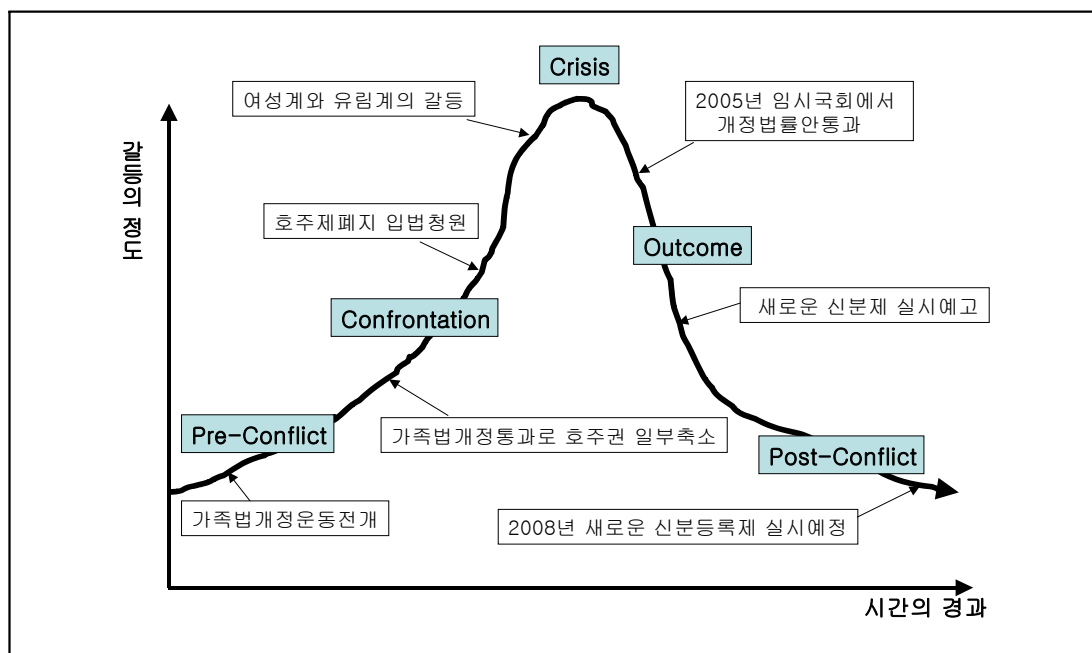
구체적인 법의 실시를 앞두고 그 제정 의의와 한계점을 통해 가족 및 정책연구자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이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개과정에서 노력하였던 일련의 과정들을 점검하면서 그 과정마다 이루어졌던 전략들을 살펴 새로운 가족등록법이 노정하는 한계점들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하며 새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화순·장혜경·김혜영외 3인, 2005,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참조)

둘째,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적극적이고도 꾸준한 홍보이다. 새 제도가 실시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일련의 저항적 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호주제의 폐해와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장점을 꾸준히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세대는 새로운 신분제도에 대한 합리적 판단 이전에 심리적·정서적 거부감이나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들이 가족의 변화를 인지하며 새로운 가족제도의 도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설득과 새 제도 실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는가, 새 제도의 실시로 실제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될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친생자 이혼 후 파양, 재혼 후 이혼, 혈연관계와 가족관계의 불일치에 따른 상속문제 등 특수 사례에 대한 법률적 적용문제 등), 새로운 제도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오해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정보의 제공과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있었는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 실시를 앞두고 그 과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가족관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의 가족, 가족생활 관련법들의 일부 개정 문제와 가족관련 법령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족관계법과 현 건강가정기본법이 조망되어 계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았지만 호주제 폐지로 인해 최소 700여개의 하위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도 회자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가족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구체적인 가족업무 시행에 있어서 중복과 누락의 비효과성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는 핵심 기제들이 되어 새로운 틀에서의 가족정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에 명시되어 있는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과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가족관련 사회정책과 프로그램들의 현실적합성을 제고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7년 현재 23개주에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주의 정책입안 시 가족초점이 반영되고 가족효과를 창출 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 및 분석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 ※참고 : 호주제 폐지 전개과정



자료: 변화순·장혜경·김혜영의 3인, 2005,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p.1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한국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주관

#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한 토론문

조 은 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I. 서

2005. 2. 3. 호주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sup>1)</sup>을 선고 받고 그 후 호주제 폐지가 근간이 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sup>2)</sup>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채택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다소의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으나 2007년 5월 17일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함)의 제정으로 호주제폐지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토론문에서는 발표문에서 언급하였던 부분은 생략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부분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한 소견

### 1. 법률제명의 문제

호적법에 대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어떠한 형태의 편제방식을 취하느냐에 있었다. 당시 가족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러한 편제방식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개인별 편제방식이 가제도를 불식시키고 보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지만, 편제방식에 대한 논의가 내용면에서 개인별로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냐 개인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법률제명문제에 있어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3)</sup>.

법률제명에 대한 발표문에서는 법률명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각시키는 것을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개별 국민의 지위를 가족 안에 묶어 두겠다는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해체에 대한 보수 세력의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제명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다소 첨부하면, 1)법명은 역시 그 법의 내용을 포괄할

1)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참조.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

3) 가족관계등록법이 국회 법사위의 대안으로 만들어지기 전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노회찬 의원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 의원의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 있고, 이념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압축된 언어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개인신분등록법(Personenstandgesetz)에서 Personenstand가 무엇인가를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Personenstand는 한 개인의 개별적인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 그리고 그들간의 가족법적인 지위를 결정해 준다<sup>4)</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핵심은 가족별 편제가 아닌 개인별 편제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그의 신분상의 특징과 그의 가족관계를 기록한 공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이 주체임에도 이를 등안시 하고 가족관계만을 강조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별을 취했다고는 하나 새로 제정된 법은 서구의 개인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별과 가족별편제가 혼합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2) 현 우리사회가 ‘가족’이라는 용어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발표문에서 문제를 제시했듯이 현행 민법이 ‘가족의 범위’와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은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2. 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

증명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분정보보호를 위해 증명서의 발급신청 자격 및 대상도 제한하고 있다.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이때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5조)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

4) stuber, Personenstandswesen, 16면.



하고 있다. 이에 제15조에 제시된 증명서의 종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다. 개인과 그의 가족관계를 한면에 볼 수 있었던 기존 호적법에 비하면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크게 진보한 법이다.

신분등록부의 기능상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정보는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이외의 것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독일의 경우(다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가족부는 가족구성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기본증명서에서 파생된 등록부로 이미 기본등록부에 기재된 사항들에 대한 2차적 등록부에 불과하다. 또한 가족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가족상황을 알기 위한 공부로써 혼인한 경우에만 갖게 된다<sup>5)</sup>.

15조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편제방식에서 외국의 가족부가 아닌 가족별 편제방식을 띄고 있다. 가족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인 부부가 중심이 되어 작성되기 보다는 본인이 중심이 되어 본인의 부모 그리고 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사항등이 기록되는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외국의 유형에서 가족부는 어느 일방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닌 구성도표도 남편과 처가 동등하게 그리고 각각 밑에 그들의 부모가 각각 기록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기록된다. 이는 또한 혼인한 부부만이 갖게 되는 증명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편제방식에서 그 증명서의 중요도에 순번을 매긴다면 기본증명서는 1.호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후 가족관계증명서는 마지막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른 기본증명서(출생, 혼인, 사망)를 근거로 하여 구성될 수 있는 부차적인 증명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

5) 가족세제감면, 연금등 복지수급이나 소득공제, 가족수당등의 수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 2)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개인별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명서일 것이다. 우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기본증명서가 많은 개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기록사항등) 기본증명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한꺼번에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출생부와 사망부는 분류되고 출생부에서 다시 3가지의 출생증서, 출생증명서, 혈통증명서로 분류되어 발급된다. 출생증서는 단지 자녀의 성명, 출생지, 년월일이 기재된다. 출생증명서에는 자녀의 성명, 출생지, 년월일, 성별, 입양 사항, 입양에 따른 당시의 양부모, 친부모가 기록된다. 혈통증명서에서는 성명, 출생지, 년월일, 성별, 입양 사항, 입양에 따른 당시의 양부모, 친부모에 계속하여 출생등록의 변경 즉 자의 성의 변경 등이 기록된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증명서는 출생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자녀의 출생지, 연월일, 부모, 자녀의 성명, 성의 변경(민법 제781조 4항, 6항),부의 인지, 혼인외자 혹은 혼인중자(44조)의 여부 등 다양하며, 한 개인의 일생사가 계속적으로 부기되는 것으로 본다면 기본증명서는 세분화된 증명서로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의문이 되는 것은 기본증명서에서 본인의 부모를 기록사항에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생과 관련된 기본사항에서 부모의 기재란이 빠졌다는 것을 이해 할수 가 없다. 이것을 가족증명서에 넣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별편제방식을 취한다고 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4. 혼인의 자의 기재 필요성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 신고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 혼외자인가 혼중자인가에 대한 사항은 출생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디에든 기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혼인 중자인가 혹은 혼인외의 자인가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사안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기본증명서를 세분화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단순히 출생만을 알고자 할 때, 혹은 그 혈통만을 알고자 할 때 그 증명서는 구별되어야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 5. 자의 성에 대한 결정

자녀의 성결정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71조는 부부가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혼인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자녀의 성결정은 그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에 대하여 781조 1항의 규정은 혼인시를 ‘출생 시’로 통일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의의와 한계

차 인 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의 문제.

호적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민등록에 관련된 법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폐지와 개인 프라이버시의 존중에 있었음. 그러나, 동 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의 존중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즉 국가가 새로운 국민등록법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호명하는 방식은 아직 가족단위에서 개인단위로 바뀌는 과도기로서의 성격을 보여 줌.

이는 법의 제명과 다음의 몇가지 법조항에서 읽혀짐.

먼저 법명을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명이 ‘가족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임.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토론회과정에서 논의의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전문위 원 검토보고는 외국의 입법례 분석과 현실적인 한계를 들어 “신분등록”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차선책으로 제시하였으나, “신분”이라는 용어가 주는 위화감 역시 지적됨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등록’에서 의미 했던 프라이버시와 “가족관계”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보이며, 자세한 담론분석은 회의록을 분석해야 할 것임.

다음으로 조항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목적 자체가 개인이 아닌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것이 주 목적임.

다음으로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1. 가족관계 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

에서 나타나듯이 가족관계가 개인에 대한 기본증명에 앞서 있음.

다음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성인으로서 혼인신고와 이혼신고시에 당사자의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본 등록법이 ‘가족관계’의 변동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함.

### □ 증명서 제출요구 규율의 문제

이러한 과도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의 문제임.

예를 들면 기업이 구성원의 정보를 취합할 때, 과거의 호적 수준의 정보를 요청 하지 않아야. 즉 기본증명만 요구해야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듯. 만약 업무능력과 무관한 가족 증명, 혼인증명까지 요구한다면, 이것은 법 개정의 긍정적 의미조차 상실하는 것이라고 봄.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가 인권침해이어왔다면, 단지 이것이 의식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율의 문제로 보여짐. 따라서 이러한 규율을 어디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과제로 남아있음.